

##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송 두 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mailto:dbsong@cni.re.kr)

강 수 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sh3737@cni.re.kr](mailto:sh3737@cni.re.kr)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타 기관의 운용현황, 도의 각종 교육프로그램들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한 다음,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ONTENTS

1. 연구개요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3.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실태분석
4.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실태분석,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등을 검토하여 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방안 및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을 모색하였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시민교육 추진근거를 위해 “충남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
  -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차원의 기획 및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도와 산하기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실행방안을 협의함.
  - 셋째, 도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 중앙기관 및 시민단체 강사풀을 활용하거나, 충남도 자체의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능한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함.
  - 넷째, 교육주제 및 교육대상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기존 도민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거나, 국가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 다섯째, 도 및 시군 차원의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되, 교육형태와 교육대상에 따라 동영상, 오디오북, 단행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함.
  - 여섯째, 모든 도민교육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충남도민 대상 모든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격을 사이버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도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01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적 원칙들의 제도화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우리의 시민교육은 말로만 민주시민교육이었지 실제 이전의 공민교육이나 국민교육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이런 교육은 국민의 단합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는 체제 내지 정권 유지교육에 지나지 않았음. 그래서 ‘민주적’ 시민교육이 제창되고 있음.
- 시민사회 내부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양성하고 민주적인 생활문화를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게 하여 우리 사회에 제도적 민주화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화가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는 되는 것이 중요함.
- 충청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숙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 등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충청남도과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각종 도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육대상과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안하여 충남형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교육’ 을 ‘민주시민교육’ 으로 직역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사용된 정치교육이란 용어가 정치권력체제의 획득과 유지라는 측면, 즉 정치체제와 관련된 교육으로 잘못 이해되었거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전득주 외, 2006).
- ※ 정치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민주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일을 일컬음. 정치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①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일 ②인간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유석열, 1986).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와 내용은 ‘민주’ 라는 교육의 내용과 ‘시민’ 이라는 자격과 대상에 대한 교육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용을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고 진행되는 교육의 의미로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할 수 있음(강원택, 김종법, 2011).
  -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
  -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 것
  -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며, 비판의식을 함양하는 것.
  -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적이며 올바른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상의 개념

-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 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2016.9.19: 남인숙 의원 대표발의).
-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공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및 제반활동” (2015.1.2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비민주적인 정치문화를 민주적인 정치문화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
-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함.
  - 민주시민교육 통해 배양된 민주적 시민들이 투표와 같은 정치투입과정에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정치체제의 산출능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정치체제의 효율성 증진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를 통합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
  - 인종, 종교, 계급 및 세대 등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그 여건에 따른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함.
- 민주시민교육은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분단극복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공공화하여 체제 우월성을 심어주고 동족으로서의 북한주민과 공존의 식 함양.

## 3)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능

-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 민주시민교육의 두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정치체제의 응집력(통합성)을 높이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기능(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공동선을 위한 개인적 의무감과 관련된 가치에 주목)

- 둘째, 민주정치체제의 다원성을 수용하고 개인주의적 성격을 고양하는 기능(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 다양성, 개인주의, 공정한 절차, 인간의 권리 등을 나타내는 자유권적 가치에 주목)
-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공익과 사익, 평등과 자유, 통일성과 다양성, 더 나아가 시민성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과정에 직면해 있음(박재창 외, 2007:32)

#### 4)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일. 무엇이 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어떤 정치체제가 보다 더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정치적 판단력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 민주시민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으로 참여에 필요한 토론능력, 사대에 대한 존중 능력, 타인배려 능력, 애국심,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력, 타인종이나 타종교에 대한 관용력 등임
- 의사소통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의 적용기능(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적 언어적용), 정보기술기능(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평가, 발표 등에 ICT활용), 타인과의 협동작업기능(협동, 토론, 타인 이해 등), 자신의 학습과 수행기능(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수행결과를 확인, 평가하기), 문제해결기능(문제확인, 이해, 대안, 실천) 등이 필요함.
- 버츠(butts, 1988)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통합성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치와 개인주의와 다원성의 가치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 앵글과 오초아(1988)는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권리존중,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인식, 사회변화와 개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홍윤기 외(2009)
  -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공동체와 정부형태, 헌법의 의미와 기본적 원리 및 국제관계와 세계시민성 등이 포함
  - 시민적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의 가치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해, 시민으로서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떠맡으려는 성향,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 가치의 존중, 민주사회의 건전한 기능에 기여하려는 태도

- 시민적 기술 및 참여적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기술, 비판적 사고능력, 상호작용과 감시활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참여기능 그리고 타협과 조정능력이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의 기본역할 함양과 기반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절차와 참여, 법치와 준법, 자유시장경제 및 나라사랑, 통일 및 글로벌 시티즌쉽 등의 세부영역으로 구분.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상의 내용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민주시민교육 내용(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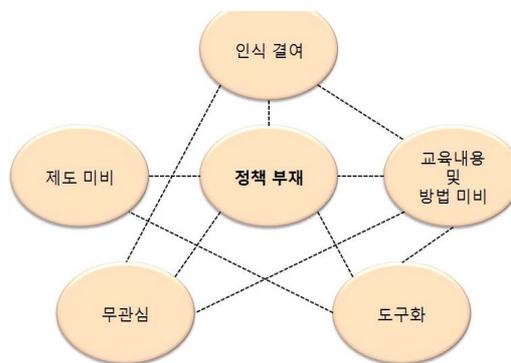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정론

- 한 나라의 시민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누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경제적 근대화, 세대교체, 민주제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과 경험, 권력교체, 책임있는 반대당의 활동 등 사회정치체제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을 통해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스스로 한계가 있음(박재창 외, 2007:24).
-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과거 권력의 정당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수사 내지는 동원기재로 전락했던 전력도 있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투입자원과 산출효과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가시적 성과나 이득을 보여주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임. 이런 이유로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이 호소력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임.

## 5)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게 정의
    - 교육선택 기회와 폭을 넓혀준다는 이점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내용의 불일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결여에 이르게 하여 민주시민교육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함.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 민주시민교육의 주 내용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향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기 보다는 편향적이고 일방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보다, 정치체제와 질서에 순응하는 정치적 의식과 태도형성.
  - 민주시민교육이 학습자인 시민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실시
    - 요구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의 결여가 사회일반에 존재
    - 관심이 효율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임.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 미비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예”, “효” 등을 강조(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순종에 초점)하고 진보 및 전교조 등에서의 제2의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이라고 반대하였음.



[그림 2-1]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6)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 제정과정<sup>1)</sup>

- 1997년 10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2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포럼결성,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입법 청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 연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1997년 10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의원 발의
- 1999년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30여개 단체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결성, 민주시민교육관련법 제정운동
- 시민사회 영역에서 단일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포럼,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논의하여, 공동으로 2000년 1월 시민교육진흥법 의원 발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2005년 11월 민주시민교육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안 마련
- 2010년 결성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2011년) 마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2012년) 마련
- 위 두 연대 단체의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연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국회에서 다시 남인순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에 접수중임.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6.9.19.)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소관위 접수)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5.2.5.) : 남인숙 의원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5. 1.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서울시(2013), 경기도(2015), 전라북도(2016), 성남시(2015), 안양시(2017)가 제정하였고, 준비중인 자치단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진보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2016), 충북교육청(2016), 전북교육청(2016), 전남교육청(2016)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 사회적 공론화 부족, 추진 주체들간의 이견, 추진 동력의 약화 등이 혼재되어 결국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실질화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국에는 국가적 아젠다로 이끌어내는 경로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1) 문성근.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 및 전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워크숍자료에서 참고.

## 7) 외국 민주시민교육 비교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방식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독일과 같은 중부유럽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
  -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을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시민을 배양할 목적으로 시민교육(citizenship) 또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으로 표현
  - 일본 : 관치의 인상을 주는 공민교육이라는 용어사용
  -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는 ‘시민’이나 ‘공존’이라는 용어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의 공존을 위한 ‘시민 혹은 공존교육’의 의미를 선호하고 있음.
  -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서구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지속성’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함양’하는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하여 실시.

[표 2-1] 외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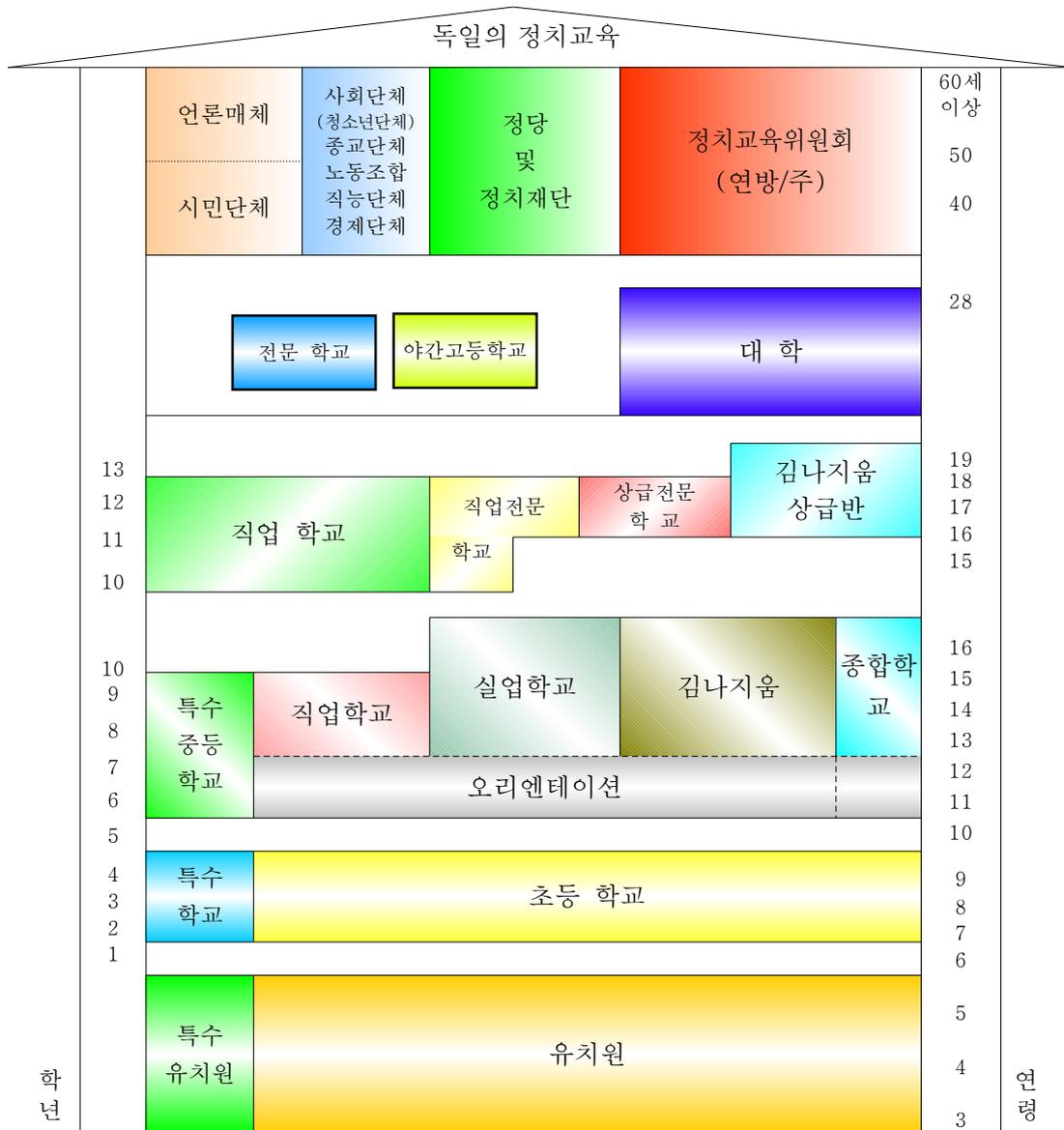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명칭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공민교육
주체	국가(주정부) / 시민 사회	국가/시민사회(국가 교육체계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민사회(공교육체계와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국가/비정부기구/ 시민단체(포괄적이고 다원적 접근)	국가/시민사회(중앙과 지방 사이에 유기적 연계가 높은 풀뿌리형)
정의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 권리와 책임을 위한 기능, 민주 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영국의 보편적 가치(개인과 가족의 존중, 사회 관계의 유지, 다양성의 가치와 환경보존, 정의, 신뢰, 정의를 유지하는 교육)	프랑스 혁명이념(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을 실현·유지하고, 프랑스 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함양 교육	국민을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하고, 정치적·사회적 비판능력과 공명한 정치 의사형성을 촉진하는 교육	비판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고, 활력있는 독립적인 시민정신을 양성하는 교육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대 : 미국적 가치를 옹호하는 교육 실시</li> <li>· 1980년대 : 국가경쟁력과 전통적 문화의 강화</li> <li>· 1990년대 : 다문화 교육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4년 : 교육법(Educational Act)제정→시민교육의 내용과 성격 강화</li> <li>· 1988년 교육개혁법안에서 『시민성』교과 신설과 타교과와의 연관성 강조</li> <li>· 2002년 : 초등에서 『시민성』교과를 선택으로, 중등에서 필수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대 : 국가관 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공교육에서 소멸</li> <li>· 1990년대 : 민주적 가치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 부활</li> <li>· 1999년 : 교육과정에서 『사회, 법, 시민교육』신설</li> <li>· 2001년 : 민주시민교육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이전 체제 순응형 국민 교육으로 실시</li> <li>· 통독 이전(1989) : 정치활동에 대한 실천적 활동과 규범, 규정 통일 등을 교육</li> <li>· 통독 이후 : 통일내용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육성과 사회통합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이전 『수신』교과를 통해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교육 실시</li> <li>· 1947년:지리, 역사, 수신 교과 폐지하고 『사회과』신설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li> <li>· 1955-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과 국가주의 교육(반공교육, 애국심 교육) 사이를 넘나듦.</li> </ul>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목표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으로서 개인의 민주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함양</li> <li>·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육성</li> <li>·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고 다문화사회의 유지 능력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도덕적 책임감, 공동체참여, 정치적 해득력 등을 함양</li> <li>·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li> <li>· 시민성 교육의 강화와 시민 교육의 다양성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가치인 토론과 참여 능력 배양</li> <li>·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시민과 인간 창조</li> <li>·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내용보다 적극적 실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정치에 참여 능력, 토론과 비판 능력의 함양</li> <li>·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li> <li>· 정치사회경제의 측면에서 민주화 의식을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li> <li>· 인간 존중과 과학적 탐구 정신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판단력, 공민으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태도 함양</li> </ul>
방법	교과서 읽기,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토론 참여,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 그룹 프로젝트 참여, 보고서 작성	활동학습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경험하면서 학습, 가상 상황에서 활동 학습, 집단토의 및 토론, 프로젝트 학습, 전일제, 반일제로 아동 권리의 날 행사, 모의선거 견학	지식의 전수 보다 토론수업, 쓰기와 읽기의 균형, 이론과 활동의 균형, 즉흥적 표현과 수식의 균형, 지적 표현과 감정표현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적인 교수법의 균형	교회나 주입식 교육 금지, 정치적 학문적 논쟁, 정치적 관심사의 관찰과 해결 능력 배양, 대화 학습, 디지털 매체 활용 학습, 놀이학습, 연구 여행 및 연수 여행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내의 토의, 이론적인 의견 표현, 상호간의 대면 접촉, 문제 해결 방법의 활용, 지식 습득의 강조

자료: 이범용. 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제49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50.

### ● 독일의 정치교육

-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지식과 통찰력을 확대시키며, 판단능력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반 노력과정으로 보고 있음.
- 독일의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확고한 뿌리를 내렸음. 정치교육은 국가 차원의 제도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배우게 되어있으며, 학교 외의 성인교육분야에서도 국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음.
- 1992년 12월에 독일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정치교육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 한 것은 정치교육이 독일인들의 내적 단합과 화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음(신두철, 2012).



[그림 2-2] 독일의 정치교육 개관도

자료 : 정창화, 200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에드.

## 2.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논의흐름

### 1) 제1단계(1945-1960년대 초) : 민주시민교육의 태동기

- 1945년 해방 이후 진행된 일반교육의 틀 안에서 강조되던 전통적 민족주의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어진 박정희 시대 역시 권위주의체제 아래 시행되었던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진정한 출발로 보기에는 어려움. 1940-50년대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한국의 전통적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접목 하려는 시도로 추진됨.

### 2) 제2단계(1960년대 초-1980년대 말) : 민주시민교육의 갈등기

- 1960년대 4.19학생의거를 거쳐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은 장기간 반공교육의 강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정체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민교육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즉,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정부주도의 정치교육과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의 상징인 국민교육현장의 선포 및 새마을운동이 이 시기에 있었다. 역설적으로 1970년대의 유신시대에는 정부 스스로 시민교육의 무게와 위험성을 인식하기도 했음.

### 3) 제3단계(1980년대 말-2002년)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시기

-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 이 시기는 학문적인 시민사회의 논쟁과 더불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추진한 각종 민주시민교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음. 또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설립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도출한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안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있던 시기였음.

### 4) 제4단계(2003년-현재)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시민단체-정치권-행정부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영역을 초월하는 포괄적 합의도출을 유도하였음(강원택·김종법, 2011:211).

# 03

##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분석

### 1. 민주시민교육 사례분석

#### 1) 중앙부처 민주시민교육 사례

- 중앙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 헌법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1] 정부부처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정부부처	주요 활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경제연구학교 지정, 교과서 개정지원 - 경제/금융 관련 경시대회 개최
법무부, 법제처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
통일부(통일연수원), 국방부	- 남북관계, 통일, 안보 관련 학습자료 개발, 체험코스 운영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국가보훈처	-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운영, 6.25참전유공자·탈북자 보훈특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 초·중·고·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국회사무처	- 어린이 국회 등 국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 사이버 인권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하위영역으로 선거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정당 및 후원회 관계자, 대학생, 교사, 일반국민에 대한 연수실시 및 연수자료 개발, 민주시민포럼 및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민주주의 해외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

[표 3-2] 2017년 민주시민교육 연수현황

구 분		과정수	횟수(회)	인원(명)
민주시민 교육	합계	23	2,910	153,730
	정당·선거관계자과정	6	209	20,480
	일반유권자 과정	8	694	23,890
	미래유권자 과정	5	1,821	105,720
	다문화가족 등 연수	2	180	3,400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	2	6	240
사이버교육	합계	3	32	22,500
	민주시민교육	2	9	18,000
	열린학습	1	25	7,500

자료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 1996년 개원한 선거연수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현재 오프라인 23개 교육과정, 사이버 3개과정을 운영중에 있음.
  - 선거/정당관계자 과정 : 정당사무처 간부연수, 당원연수, 정당회계책임자 연수, 정당사이버담당자 연수, 인터넷언론(포털업체)관계자 연수, 정치아카데미
  - 일반유권자 과정 :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참여 연수, 교원연수,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연수,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대학생학점인정과정, 대학생정치참여과정, 대학생 청년리더스쿨
  - 미래유권자 과정 :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청소년 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 모의 선거교실
  -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 : 다문화가족 연수, 북한이탈주민 연수
  - 민주시민교육전문강사 과정 :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과정
  - 사이버연수과정으로 유관기관공무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과정), 공정선거지원단(공정선거지원단 과정), 열린학습(공직선거법 등 이해과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민주시민의 한 영역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 본부,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해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교육과정

사업명	유형	사업내용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공직자 대상 사이버교육, 교원대상사이버 교육, 시민대상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오프라인교육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방문프로그램, 기타
의무교육	오프라인교육	정신보건 소집교육(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분야종사자
특강교육	오프라인	인권특강(인권강사요청),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자료 :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교육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사이버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하에 청렴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음.
  - 청렴연수원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으로 기관대상 청렴교육(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청렴리더십 함양과정(고위직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청렴리더십 함양과정(학교장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신규자과정(공직자로서의 역할인식 및 청렴가치 내재화 토대마련), 승진자(살무자)과정(공공기관 승진자 및 6급이하 공직자의 부패위기 상황의 대처역량 강화), 승진자(관리자)과정(공공기관 승진자 및 4-5급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역할 중요성 인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및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각급 기관 청렴교육 수요 충족), 청렴교육강사 강의시연 평가(교수역량을 갖춘 청렴강사 선발),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부패취약 종사자에 대한 청렴의식 함양 및 부패대응능력 강화), 청렴교육 교원직무연수(청렴체험 교육프로그램 전수로 학교청렴교육 활성화 제고), 청렴역량 향상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청렴역량의 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은 이러닝 기본교육으로 청렴, 반부패, 공직자의 길,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부패영향평가 등 2017년 현재 81개 프로그램이 운영완료 및 운영중에 있음.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히, 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함.
  - 원내교육개설 교육과정 : 통일정책최고위(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준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 통일교육전문강사(학교 및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역량제고), 학교통일교육(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의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통일지도자/통일미래기획/평화통일 기반구축(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 사회통일교육(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위원 뿐 아니라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차원에서 각계인사 대상 교육), 글로벌통합교육 과정(통일 한반도의 미래

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에 역점을 두어 교육)을 운영중에 있음.

- 사이버개설 교육과정 : 교육교육(초중등 교원대상 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지도자로서 역량 강화), 사이버통일교육(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질향상), 학점은행제 인정과정(사이버통일교육 학점은행제 교양학점 인정과정을 위한 강좌)

## 2)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

시민단체	주요활동
YMCA	- 시민운동, 사회체육운동, 국제교류 및 협력 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 정신계승운동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 나눔 교육사 양성, 학교 나눔 방문 교육
삼성꿈나무재단	- 더불어 사는 배움 공동체 구현: 멘토링꿈장학, 리더육성장학, 배움터교육지원, 글로벌 장학
흥사단	- 역사강좌,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강사양성과정
전경련	- 경제교육
신문사	- NIE(신문활용교육)
교육공동체프로젝트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공동체와 삶이 있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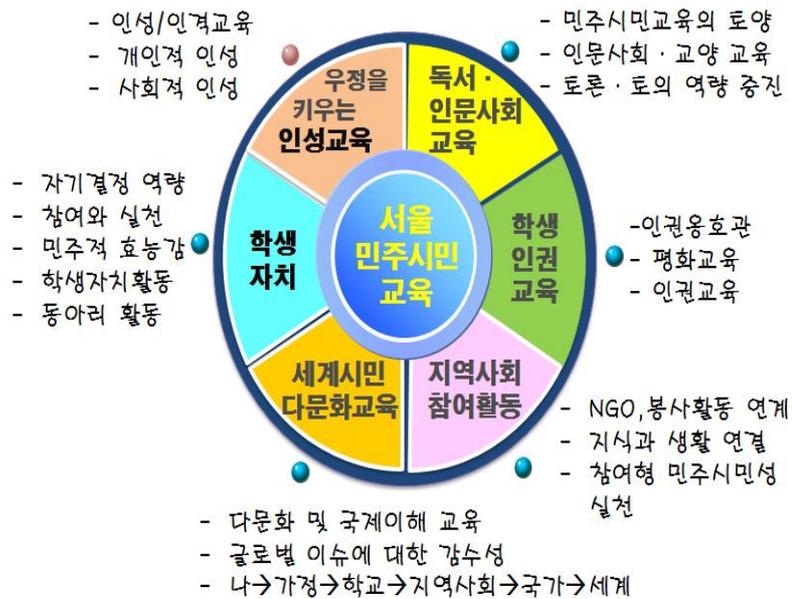
## 3)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례

-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주로 교과서, 교육시수, 방과후 교육 등의 형태로 학교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3-1]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2017.1)에 근거하여 2017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상호 존중과 책임의 인성교육 및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실현”, 추진전략으로 학생자치를 통한 자기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교복 입은 시민 육성,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제 구축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와 추진전략하의 중점추진과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열린세계시민교육 강화, 독서·인문사회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 참여봉사활동 등으로 제시하고 27개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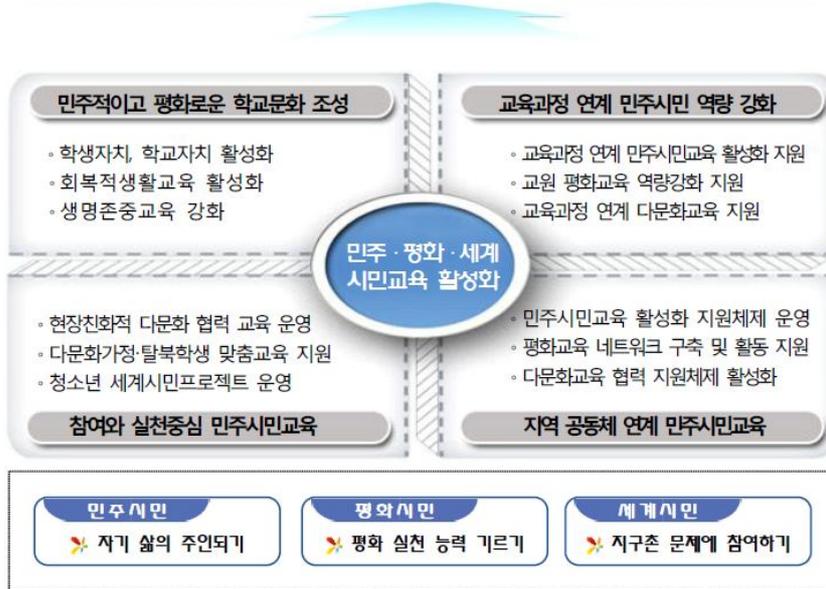


[그림 3-2] 서울민주시민교육 체계

자료 : 서울시교육청. 2017. 2017학년도 민주시민교육 주요운영 현황.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15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라는 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발간하였음.
  - 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는 시민과 가치(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시민과 제도(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의 안전)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 2.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조사

### 1) 충청남도(직속기관, 사업소)

- 충청남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개설한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경제정책(경제교육, 사회적경제), 청소년정책(방과후), 평생교육(문해교실, 한국어), 충남학, 특성화고, 농수산(경영인, 수산생물, 어업, 어업전문가 등), 도의새마을, 전략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주민자치, 여성교육(자치, 경력단절직업,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정보소외계층과 관련한 내용이며, 교육대상도 일반도민,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농수산경영인, 다문화가족, 주민자치위원, 장애인, 고령자,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다양함.

- 교육프로그램은 도 실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간지원기관, 분야별 전문기관, 도출연기관, 시민단체, 교육청(학교), 시군 등에 공모 또는 위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2) 충청남도 출연기관

- 충청남도 출연기관에서 개설한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젠더교육, 학교폭력예방, 상담(포레 상담, 청소년상담,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전문상담, 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심리 검사, 꿈드림양성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청소년, 금연, 리더십, 역사문화교육(유교, 서원, 자원봉사, 박물관), 학교밖청소년(문화/직업체험, 창업캠프, 대학입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등이 주요내용이며, 교육대상은 여성리더, 청년리더, 컨설턴트, 공무원, NGO 및 도민, 청소년 및 유관기관 실무자(상담사 등), 여객/화물종사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으로 다양하나, 주로 여성 및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음.

## 3) 시사점

- 충청남도과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운영중인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중 주민자치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정영역별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과 시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 종합(시행)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자문위원회)
  -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전라북도 등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음.

# 04

##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

### 1.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목표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가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안 과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정립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될 수 밖에 없어 미션, 비전, 목표, 핵심가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한정하고자 함.
  - 미션 :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사명, 존재이유, 존재가치, 조직이념을 의미함
  - 비전 :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미래상, 꿈이 실린 목표를 의미함
  - 목표 : 충남 민주시민교육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비전의 구체적인 지향점)
  - 핵심가치 :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이며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신념이나 신조를 의미함.
- 이보라(수원시 평생학습관 연구원)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 관점이 내포한 의미를 고려하여 비전/목표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함.
  -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 보편적 시민의식 성장을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 2.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설정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마그데부르크선언(Magdeburger)<sup>2)</sup>을 참조하여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1. 민주주의는 역사적 성취다. 그것은 자연법칙도 우연도 아니며, 인간의 행위와 교육의 결과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학교와 청소년 교육의 중심 과제다. 민주주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주적 관계의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은 국가, 사회, 교육이 계속해서 맡아야 할 과제다. 반인간적인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경험은 국가와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빠르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명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상기는 민주적 교육의 필수 구성요소다.
2.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 폭력, 반유대주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발전과 위협을 볼 때,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헌법의 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헌법의 선언이나 정부의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형식이자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주주의가 사회의 형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적 공동체나 결사체나 제도를 발전시키고 형성하는 데서 실천적으로 작용하는 준거로 존중하고, 타당하게 하며, 공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민주주의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들을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교제와 행위의 토대이자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들을 이런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관계의 토대는, 출신, 성, 나이, 종족적 귀속성, 종교,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인정에 기초하는 존중과 연대다.
5.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민주적 방법은, 모든 관련자를 포괄하고(포용과 참여), 정의의 원칙을 지향하는 숙고된 결정과정을 가능하게 하며(숙의), 수단을 합목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효율), 공론장을 형성하며(투명성), 행위와 제도를 법과 도덕이라는 준거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정당성), 확고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데 기초한다.
6.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것이다. 민주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확고한 민주적 태도와 행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토대다. 그에 덧붙여 민주적 행위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칙과 규칙, 사실과 모델, 제도와 역사적 연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7.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일생에 걸친 과제다. 모든 새로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민주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특히 학교와 청소년 교육의 근본적인

2) 2005년 독일 연방-주-협의회가 주최한 “민주주의 배우기와 살아가기”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채택

목적이다. 이는 우선 모든 미래 세대의 배움과 발전을 촉진해야한다는 과제로부터 드러난다. 학교에서 포용과 배제, 지원과 선발, 인정과 모욕, 투명성과 책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발전시키는지 또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고 자명하며 유용하게 다가오게 하는지를 결정한다.

8. 민주주의는 소속감, 함께하기, 인정과 책임을 통해 경험된다.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폭력에 대한 대안을 인지하여 선택하고, 자신의 행위능력을 신뢰하며(자기효용감), 공동체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준비된 자세를 기르기 위한 토대다.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면서도 함께 하는 것을 민주적인 근본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 맹목적인 복종이나 타인에 대한 폄훼와 혐오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형성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는 그들이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제대로 계몽되지 못한 탓이다.
9. 학교에서 민주주의 배우기와 민주주의 살아가기를 함께 결합시켜야 한다는 요청은 수업,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관계맺기의 형식 모두에 대해 함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프로젝트 학습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교육적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학교에서 민주주의 배우기와 민주주의 살아가기는 학교나 학교 관련 위원들의 다양한 형식들과 다양한 수준들에서 지원, 함께하기, 참여를 시도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바깥에 있는 공동체의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한 활동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평가를 요구한다.
10.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교육은 학교, 특히 교사들이 말아야 하는, 점증하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과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모든 세력은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노력들을 지원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공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제

####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화 추진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전라북도에서 제정 운용중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충청남도에서도 제정함.
- 조례제정을 통해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의 명확화, 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민주시민교육 가능함

## 2)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정립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참여성, 보충성의 원칙

- 충청남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후 큰 틀의 방향성 및 기준을 제시함.
-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함.

## 3) 민주시민교육의 공정한 추진체계 확립

심의기구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 충청남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로드맵을 마련함.
- 도민대상 민주시민교육과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사회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육과정의 정당성 및 체계성을 확보함.

## 4) 민주시민교육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기관,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정립하지 않고 분야별로 개별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출연기관, 시민단체 등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주체들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5)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

- 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 중앙부처나 시민단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도민에 대해 전문강사로 우선채용하는 방안 모색.

## 4. 도민교육프로그램들과의 연계 운영방안

### 1)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도차원의 기획단 구성

- 충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도민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집행하는 관계자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가칭 “민주시민교육 기획단” 을 구성하여 도민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도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교육추진방안을 논의함.
-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특별위원회” 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충남도민, 공무원, 강사,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도민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도 인권교육, 성희롱 및 성추행예방교육과 같이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시책으로 추진함.

### 3) 도민교육프로그램 개설시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의무편성

- 충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도민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도민교육프로그램중 한두시간 교육과정, 3시간이상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5분 또는 10분 정도의 동영상상을 제작하여 도민교육프로그램 전에 상영.

####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와 시군차원의 표준교재 제작

- 민주시민교육은 강사가 직접강의 하는가, 사이버 교육 또는 동영상교육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재 제작이 필요함.
- 충남도 해당 실과에서는 강사양성과정, 일반 도민과정 등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 동영상교육 등 다양한 표준교재를 제작함.

#### 5) 민주시민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의무화

- 충청남도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직접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개설한 사이버 민주시민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등록자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5. 교육대상 및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

#### 1) 민주시민교육 표준교육과정

- 민주시민교육 일반원칙의 준수
  -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준수한 학습요목 작성 의무화
  - 시민능력 : 파악능력, 비판능력, 판단능력/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훈련사 배치
  - 교육사의 기획과 조직으로 정치가, 행정가, 활동가, 전문가, 관심시민의 교육장 설정
- 지역별/활동영역별 민주시민교육안 구별 및 전문화 : 주민차지
  - 주민생활의 복원과 활성화 : 생활단위 일-놀이-배움의 기획
  - 구역별 내지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교육안

- 법정사회교육: 민방위,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교육에서 정치관련성 반드시 넣음
- 활동영역 : 경제, 인권, 소수자 별 민주시민교육안 연구
- 국가차원 민주시민교육 : 헌법에 설정된 기구 중심
  - 민주주의 제도 : 선거를 비롯한 각 권력기관 운영 규칙과 접근법
  - 민주시민적 가치와 태도
- 지구차원 민주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
  - 지구사회의 이해
  - 지구/대륙 정치
  - 지구적 만남의 촉진

### 보이텔스바흐 협약

독일의 작은 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이 협약은 본래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협약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첫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이다.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학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논쟁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해 보고, 또한 자신들이 그런 정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대상은 일반도민, 민주시민교육강사,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학

생, 여성 등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도민, 민주시민교육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코자 함.

### (1) 일반도민

- 3가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 개인적 차원, 시민사회 차원, 민주주의 차원 등

[표 4-1]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 모형

3단계		민주주의 역량 Democratic Competency(민주주의)	
1	다양성 존중	다원주의	• 다양성/차이 인정 • 어울림/조화
		관용	• 이해심 • 용서
2	참여의식	정치적 활동	• 투표/선거 참여 • 투쟁 • 정치 참여 • 정치의식 • 저항정신 • 사회적 관심 • NGO활동
		시민활동	• 지역사회 참여 • 협동 • 소속감 • 공동체의식 • 연대 • 나눔 • 봉사
		미디어 역량	• 액세스 • 비판적 모니터링 • 미디어 활용
		민주적 의사 결정	• 절차적 합리성 • 의사소통 • 비판능력 • 갈등 조정 능력 • 타인의 의견 경청 • 자율적 사고 • 토론 능력 • 조정 능력
3	세계시민성	다문화 역량	• 공존 • 다문화 존중
		세계시민의식	• 통합적 담론 • 지속 가능 발전 역량
2단계		시민성 역량 Citizenship Competency(시민사회)	
1	국가 정체성	국가의식	• 애국심 • 충성심 • 올바른 국가관(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의식	• 정체성 • 올바른 역사의식 •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2	권리와 책임의식	준법 (규범 준수)	• 책임감 • 의무감 • 준법정신 • 순종(순응) • 엄격함 • 권위존중 • 기초 법지식 • 공적 의무 충실 • 사회적 책임
		도덕성, 양심	• 정의감 • 투명성 • 도덕성 • 정직성
		권리의식	• 권리 인식 • 권리 주장 • 권리 존중
3	신뢰와 가치	신뢰감	• 공공성 • 공익성 • 상호 신뢰
		평등	• 기회 균등 • 공정성/공평성 • 독점 반대 • 소수자의 권리 존중
		존중	• 배려 • 인권 존중 • 공감

1단계	핵심 역량 Key Competency(개인)	
1	자율적인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 • 자기 조절 역량 • 인내력 • 독창력 • 결정 능력</li> <li>• 유연성 • 변화 즐기기 • 기회를 만들어 낼 줄 아는 자신감</li> </ul>
2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 능력 • 책임감 • 팀워크/협력 능력 • 분쟁 · 중재 기술</li> <li>• 커뮤니케이션 능력 • 비판 처리 능력</li> </ul>
3	언어 · 공학기술 등 도구의 포괄적 사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능력 • 계획 능력 • 조직력 • 문제 해결력</li> <li>• 반성(반추) 능력 • 문맥적 사고력 • 조작 기술</li> <li>• 혁신의 의지 • 분석 역량 • 판단 능력/비판력</li> </ul>

자료: 조찬래. 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표 4-2] 영국의 주요지역 허브별 민주시민교육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중점영역 여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지역공동체 및 공공생활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li> <li>•공동체 구성원의 리더십 향상, 기술 및 정보공유, 상호협력 활성화</li> <li>•지역의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참여</li> </ul>
지역공동체에서의 시민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 주요이슈에 대한 연구 및 판단능력 강화를 위한 과정 제공</li> <li>•국민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서비스의 지역 내 운영에 대한 평가능력 배양을 위해 국민의료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li> </ul>
지역공동체에서의 시민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체장애인, 난민 등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입안과정에 대한 참여능력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li> <li>•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제공</li> <li>•변화를 위한 지역모임, 공동체파트너십, 길드, 학생과 난민모임 등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을 주요설립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li> </ul>
시민단체대표의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시민단체 및 그룹 대표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제공</li> <li>•소수인종, 종교, 정치적 시념, 성적 소수자 단체 대표들이 참여</li> </ul>
시민사회의 공공생활 참여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을 포함한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컨퍼런스 개최 및 교육과정 제공</li> <li>•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각종 사회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이주농민 문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li> <li>•범죄 및 무질서 감소를 위한 지역파트너십, 지역교육당국, 보스턴 대학, 영국교회 등 지역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주요 단체들이 교육의 중요역할을 담당</li> </ul>

자료: 선거실(법제과). 2011.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1-4호.

## (2) 민주시민교육 강사

### ● 민주시민교육사(강사)

과정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좌1 : [시민교육론]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 시민능력</li> <li>▪ 강좌2 : [시민정치론] “내 나라의 주인 되기” - 국민주권, 시민가치, 시민지식</li> <li>▪ 강좌3 : [시민실천론] “시민이 주인 되어 돌볼 일” - 시민권능으로 문제 풀기</li> </ul>
강의기간	2015년 3월 31일~ 6월 11일 (5월 5일/7일 휴강) 매주 화(1개 강좌)/목(2개 강좌), 매회 2시간, 10주차 총 60시간 강의
수강인원	(2015년 3월 25일 현재) 지원자 총 84명
강좌1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론]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 시민능력</li> <li>-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좋은 시민이 되게 시민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이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고, 현실정치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 이해를 획득하며, 공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정치적 참여의 실천적 능력과 권능을 강화한다.</li> </ul>
강좌2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정치론] “내 나라의 주인 되기” - 국민주권, 시민가치, 시민지식</li> <li>-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권자인 정치체제로서, 이 주권자 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정치체제이다. 민주정치의 길은 이 주권자가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하느냐에 좌우된다. 따라서 시민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적 가치를 투철하게 인지하면서, 민주정치의 제도를 능란하게 활용하여 시민적 공감을 창출하는 것에 민주주의 국체의 성공을 담보하는 시민정치의 목표이다.</li> </ul>
강좌3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실천론] “시민이 주인 되어 돌볼 일” - 시민권능으로 문제 풀기</li> <li>- 민주시민교육에서 습득한 시민적 능력을 실제의 정치현안에 적용하여 정견을 정립하고 시민적 실천의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 공동체 단위의 현안쟁점을 선택하여 정치적 이해와 실천을 실제로 강구한다.</li> </ul>
홍보/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정치대중에 특정한 홍보를 행한다.</li> <li>- 대학생들에게도 향후 진로와 사회활동을 위해 수강을 권유할 수 있음.</li> </ul>

자료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

● 시민교육론 :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 학습목표 :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그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사의 기본 자질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운영법을 체득하여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고, 현실정치에 대한 정치적 문해력을 함양하여, 민주정치에의 참여를 위한 시민적 실천능력과 권능을 제공함.
- 학습개요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론(개념, 역사, 이론, 실태, 체계와 내용)과 그 운용론(조직과 방법)을 학습함.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꾸려갈 ‘좋은 시민’ (good citizen)이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좋은 시민은 현실 정치의 운동과 실시간으로 병행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민주)시민교육에 의해 정치현안에 대해 고품질의 의견과 판단을 제출할 줄 알게끔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세부일정표

주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b>1차: 민주시민교육 기본론 (개념, 역사, 이론, 실태)</b>				
1	03/31	개강 의례	수강생 소통의 기초 놓기 : Ice Breaking 교육과정 전반 (내용과 과제) 소개와 질의응답 내빈 축하 및 토틀이	
2	04/07	성립요건 /개념	유능한 주권자로서 좋은 시민 없는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 - 민주주의,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그 필요성 -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공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연원과 현대적 계기)	
3	04/14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사례 (미국, 독일, EU, 영국, 스위스 등) ◆ 민주시민교육사 과정 제1기 자치회 조직 (회장, 총무, 교육조직)	
4	04/21	작동	민주시민교육의 작동(주체, 영역, 내용)과 작동 원리 -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중심으로	
5	04/28	영역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기능 그리고 시민적 활력과 공감의 창출 (시민지식, 시민가치, 시민기능, 시민실천) - 시민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유형	
<b>2차: 민주시민교육 운영론 : 시민적 이성과 감성의 발현 * 휴강일 : 5월 5일</b>				
6	05/12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의 진화와 민주주의 (SNS, 웹2.0에서 웹4.0까지)	
7	05/19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경청과 토론의 철학과 기법	
8	05/26	의사표현	소통의 실현과 효과 체험 정치적 글쓰기와 말하기	
9	06/02	문화매체	문화를 통한 정치 (문자매체, 영상매체, 음향매체 등)	
10	06/09	민주시민 교육사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기획과 조직 (주제 선택, 방식 결정, 강사 선정,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결과 기술과 평가, 사후 관리)	

자료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

● 시민정치론 : 내 나라의 주인되기 : 국민주권, 시민가치, 시민지식

- 학습목표

·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한 시민의 실존 형태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같이 관찰.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주권이 구체적인 상황 현장에서 어떻게 관찰되거나 되지 않는가를 탐색.

- 학습개요 :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실현된 현장에서 형성된 시민민주주의의 고전과 대한민국 헌법을 독해하면서 시민정치의 이념과 실재를 탐구함

- 세부일정표

주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b>1차.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시민</b>				
1	04/02	민주-시민 공(衆)진화	정치공동체 : 위기와 압제에의 공동대처 민주주의 진화 : 고대 민주주의에서 현대 민주주의로의 도약 -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맹자, 그리고 쫓소 민주주의의 자생적 발전사로서 한국현대사 : 반독재 투쟁의 역사적 지속성	
2	04/09	시민위상 /권력과 권리	시민 개념 진화의 문명사적 보편성 - 주권, 인권, 인간존엄성 주권자로서 시민의 민주적 의지형성 - 시민권력(법) - 시민불복종(소로) - 세계시민(칸트)	
3	04/16	시민가치	가치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	
4	04/23	시민권력	정치공동체 시민권력의 규약으로서 헌법	
5	04/30	시민권능	주권행사의 입장에서 본 대한민국 헌법 - 국가권력, 사회권력, 시민권력	
<b>2차. 민주국가의 작동 : 주권 행사의 양과 질 ※ 휴강일 : 5월 7일</b>				
6	05/14	선거	대한민국 헌법의 선거제도는 주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는가? - 헌법 제24조(선거권), 제41조(국회의원) 및 제67조(대통령)	
7	05/21	평화통일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민족통일을 가능케 하는가? - 헌법 제66조 ③항(대통령) 및 제92조(민주평통자문회의)	
8	05/28	생존/행복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들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2조(근로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제119조(경제 및 경제민주화)	
9	06/04	재해/안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그 피해당사자와 국민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헌법 제34조 ⑥항	
10	06/11	헌법재판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재할 수 있는가? - 헌법 제111조	

자료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

● 시민실천론 : 시민이 주인되어 돌볼 일 : 시민권능으로 문제풀기

- 학습목표

· 갈등상황의 이해력과 해결능력 증진

· 공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시민적 권능의 강화

- 학습개요 : 시민정치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민주시민교육 방법에 의거하여 운용하는 일종의 실습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수강자들의 의사 및 시민교육론과 시민정치론 수업의 진행 내용 및 분위기에 따라 쟁점 현안이 교체될 수 있음.

- 세부일정표

회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1차: 시민정치 쟁점1. 민생				
1	04/02	경기부양	경기 활성화 - 가능한 얘기인가?	
2	04/09	세금/복지	세금은 왜, 얼마나 내서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하나? - 조세 정의	
3	04/16	평등/성장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유리한가? - 양극화와 풍요	
4	04/23	인구/국민	2300년, 대한민국은 없어지나? - 저출산의 늪	
5	04/30	세대 연대	노인이 청년의 소득과 일자리를 뺏고 있다?	
2차: 시민정치 쟁점2. 지구적/국가적/국지적 쟁점 ※ 휴강일: 5월 7일				
6	05/14	에너지 갈등	에너지를 언제까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것인가?	
7	05/21	기후/생태	이 지구를 위해 우리 집 전열기 몇 개를 끌까?	
8	05/28	분단/평화	북한 핵 없는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9	06/04	주민생활	기초주거(마을) 단위 쟁점 추출	
10	06/11	시민실천 기획 발표	수강생 시민실천 구상 (조별 제출과 발표 및 자체 평가)	

자료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

### (3) 학생대상 민주시민교육

● 서울시교육청

[표 4-3]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 분	교과내용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적 효능감을 키워가는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li> <li>•소통과 배려를 통한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li> <li>•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li> <li>•학교지역사회의 학생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실현</li> <li>•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활용</li> <li>•통일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강화</li> </ul>
열린세계시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를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li> <li>•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교원연수 운영</li> <li>•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li> <li>•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li> <li>•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li> <li>•동아시아 역사학습조조자료 제작</li> </ul>
독서, 인문사회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 토론교육 활성화</li> <li>•인문소양교육 활성화</li> <li>•학교도서관 활성화</li> <li>•독서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li> <li>•역사교육 내실화</li> </ul>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li> <li>•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운영지원</li> <li>•인권교육 활성화</li> <li>•학생인권동아리 활동지원</li> <li>•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li> <li>•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제작 배포</li> </ul>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참여 학생봉사활동 지원거버넌스 구축</li> <li>•학생봉사활동 운영지도 역량 강화</li> <li>•실질적 봉사학습을 위한 학생주도 봉사활동 활성화</li> <li>•우수사례 공유 평가를 통한 학생봉사활동 내실화</li> </ul>

자료: 서울시교육청. 2015.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생

[표 4-4] 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 분		교과내용	
시민과 가치	인권과 시민	청소년과 인권	청소년, 보호의 대상인가 권리의 주체인가
		기본권과 권리제한	규제는 문화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인권과 법	인권과 법이 상충될 때 시민의 선택은?
		자유와 시민의 의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성과 차이	다양한 가족	달라지는 가족개념, 어떻게 봐야 하나?
		나와 다른 장애인	통합교육,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을까?
		같은 사람, 다른 피부색	다문화사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공감과 연대	공감과 자발성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경제적 만족과 윤리적 가치,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연대의 사회적실천, 기부	기부문화확산, 어떻게 받아들일까?
		연대 그리고 복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지구촌 시대의 공감과 연대	난민 보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자연과 환경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대책, 원전이 대안인가?
		미지의 식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GMO)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은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은?
	평화와 공존	평화를 깨는 목적	평화를 깨는 학교폭력, 어떻게 해야 하나?
		평화를 지키는 방식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갈등이 변화하는 두 가지 모습
시민과 제도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과제	현대 민주주의,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투표와 참여	의무투표는 시민의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민참여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 정부지원금, 약인가 독인가?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다수결, 어떻게 볼 것인가?
		부패와 청렴사회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어떻게 이를 것인가?
	노동과 경제	노동과 가치	노동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와 책임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과 사회적책임	사회책임경영, 어떻게 보아야 하나?
	언론과 미디어	공익과 국가의 역할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공익을 위한 선택인가?
		미디어의 두얼굴	미디어의 두 얼굴,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언론인의 윤리	윤리가 먼저일까, 직업의식이 먼저일까?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영상물 등급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시민사회와 안정	뉴미디어와 공동체의 미래	뉴미디어, 소통의 확장인가 단절인가?
		안전과 책임	사고예방의 열쇠는 어느 쪽일까?
		안전과 비용	많은 사람의 현실적 이익인가 소수의 안전인가?
		과학기술과 안전사회	안전과 위험 사이의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외,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창의지성).

● 잉글랜드 학교시민교육(11-16세)

[표 4-5] 영국의 학교시민교육 커리큘럼 수립지침(11-16세)

구 분	주 요 내 용
범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정치적, 법적 권리, 인권 및 시민의 책임</li> <li>• 법과 사법제도의 기능 및 청소년과의 관련성</li> <li>• 투표 및 선거를 포함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주요특징</li> <li>• 언론의 자유, 견해의 다양성, 여론형성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 및 책임</li> <li>• 지역공동체와 환경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 및 집단, 단체가 취할 수 있는 행동</li> <li>• 지역 및 국가 내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전략</li> <li>• 지역공동체의 필요와 이를 공공서비스 및 시민사회부문의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방법</li> <li>• 공공기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관한 경제관련 의사결정방법</li> <li>• 아이디어, 신념, 문화, 정체성, 전통, 관점 및 가치의 다양화 등 영국사회의 변화</li> <li>• 영국에서의 이민 및 이민의 발생이유</li> <li>• EU, 기타유럽국가, 영연방, UN 및 국제사회와 영국의 관계</li> </ul>
커리큘럼은 시 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주제 혹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그룹 및 학급 토의</li> <li>•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개발 및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사용 및 적용</li> <li>• 개인 및 그룹 활동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경험</li> <li>• 학교 및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li> <li>• 의사결정, 단체행동 등 다양한 종류의 개인 및 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li> <li>• 다양한 정치문제들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환경적, 역사적 및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찰</li> <li>• 정보의 출처 및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해석</li> <li>• 기타과목 및 영역과 시민교육간, 학제간 연구</li> </ul>

자료: 선거실(법제과). 2011.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1-4호.

## 2) 교육주제에 따른 교육과정

-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는 인문교양, 민주주의, 평등, 공동체, 지방자치, 다문화, 통일, 사회봉사, 역사, 정치, 환경, 성인지, 인권 등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일대비 남북한 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통일부 정책연구, 2016)을 참고하여 사례를 제시하였음.

(1) 자유민주주의 영역

과목명	단원	내용요소
민주주의의 이해	▣ 민주주의의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li> <li>• 국민주권과 사회계약</li> <li>• 자기입법과 자치</li> </ul>
	▣ 민주주의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정주의</li> <li>• 다수결의 원리</li> <li>• 권력분립의 원리</li> </ul>
	▣ 민주주의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정치체제</li> <li>•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li> <li>• 정치발전과 민주주의</li> <li>• 미래의 민주주의</li> </ul>
	▣ 민주주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li> <li>• 의회와 행정부의 유형</li> <li>• 사법제도와 법원</li> <li>• 선거제도와 정당</li> <li>•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정치</li> <li>• 행정과 거버넌스</li> </ul>
민주주의와 통일	▣ 민주주의와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li> <li>• 민주주의와 경제성장</li> </ul>
	▣ 남북한 정부수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정부수립과 민주주의</li> <li>• 북한의 정부수립과 사회주의</li> </ul>
	▣ 미래 통일의 전망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한국의 영토</li> <li>•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체제</li> <li>• 통일한국의 사회</li> </ul>
민주시민의 역할	▣ 민주적의사형성 및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이슈와 의사형성</li> <li>• 이익분쟁 및 갈등의해결</li> <li>• 일상생활과 이슈토론</li> </ul>
	▣ 공적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li> <li>• 지방선거와 기초의회</li> <li>• 투표와 집계</li> </ul>
	▣ 시민단체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의 종류와 실제</li> <li>• 시민참여활동과 봉사</li> </ul>
민주적 가치 · 태도 · 의무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li> <li>• 인권의 역사와 삶의 변화</li> <li>• 인권의 침해와 구제</li> <li>• 개인과 국가의 행복</li> </ul>
	▣ 민주적 생활태도의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과 관용</li> <li>• 연대의식</li> </ul>
	▣ 민주시민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심과 애향심</li> <li>• 시민사랑과 도덕성</li> <li>• 공동체와 책임의식</li> </ul>

(2) 기회균등적 복지주의 영역

과목명	단원	내용요소(사례중심)
평등 · 사회정의 · 인권	▣ 평등의 가치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의 가치와 근거</li> <li>• 절대적·상대적 평등</li> <li>• 기회적·결과적 평등</li> </ul>
	▣ 차별과 역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과 구별의 개념</li> <li>• 역차별과 개선방안</li> </ul>
	▣ 소수자와 소수집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자와 소수집단의 개념</li> <li>• 다수의 횡포와 소수자보호</li> </ul>
	▣ 공정성과 사회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작용과 공정성</li> <li>• 사법작용과 정의실현</li> </ul>
	▣ 인권 침해와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정책과 기관</li> <li>• 인권침해와 구제</li> <li>• 글로벌 이슈</li> </ul>
삶의질과 복지	▣ 삶의질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된 행복의 의미</li> <li>• 경제성장과 환경개선</li> <li>• 정신적삶과 문화예술</li> </ul>
	▣ 개인의 삶과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속의 개인의 삶</li> <li>• 국가밖의 개인적 삶</li> <li>•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li> </ul>
	▣ 복지주의의 기원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li> <li>• 각국의 복지주의</li> <li>• 최근의 복지이슈</li> </ul>
	▣ 다양한 복지제도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복지제도와 정책</li> <li>• 남북한의 복지제도</li> <li>• 기업의 복지제도</li> </ul>
공공선과 사적이익	▣ 공공선의 의미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공공선의 관계</li> </ul>
	▣ 사익과 공익의 충돌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서 사익과 공익</li> <li>• 공익과 행정작용</li> <li>• 행정구제와 사법구제</li> </ul>
	▣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선과 경제성장</li> <li>• 인류공영과 공공선</li> </ul>
공동체의식과 공동체감	▣ 공동체와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공동체와국가</li> <li>• 시민의식과공동체</li> </ul>
	▣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과 주민등록의 개념</li> <li>• 복지혜택과 납세</li> </ul>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애정,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연고·혈연주의</li> <li>• 기부와 봉사의 공동체적 함의</li> </ul>

(3) 글로벌 다문화주의 영역

과목명	단원	내용요소(사례중심)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 문화와 인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다양한 생활</li> <li>• 컬러쇼크와 관습(도덕)</li> <li>• 문학예술과 행복한삶</li> </ul>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인종, 다민족과 이주</li> <li>• 이주노동자와 문화적응</li> <li>•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li> </ul>
	□ 다문화사회의 의미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의 차이와 사회적갈등</li> <li>•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와 책임</li> <li>• 시민권과 정치적권리</li> </ul>
	□ 다문화주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li> <li>• 속인주의와 속지주의</li> <li>• 각국의 이주정책</li> </ul>
우리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와 우리사회의 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다양성과 소수자</li> <li>• 문화적소수자의 인권</li> </ul>
	□ 우리사회의 차별유형과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취향과 차별</li> <li>• 지역, 연고주의와 차별</li> <li>• 인종, 국가편견과 차별</li> </ul>
	□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법과 이민법</li> <li>• 다문화가족 지원법</li> <li>•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li> </ul>
다문화주의와 통일	□ 다문화사회와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언어의차이</li> <li>• 남북한의 가정생활</li> <li>• 다양한 문화와 생활</li> </ul>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적 편견과 차별</li> <li>• 생활관습의 차이와 갈등</li> <li>• 공중도덕과 갈등</li> </ul>
	□ 미래 통일한국의 문화적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문화(한류)의 확산</li> <li>• 세계문화의 수용과 향유</li> <li>•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li> </ul>
다문화적 가치·태도·의무	□ 다양성의 가치와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고유성</li> <li>• 세계문화의 수용과 향유</li> <li>•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li> </ul>
	□ 문화적 관용과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안의 차별과 편견</li> <li>• 다른 문화의 고유성 존중</li> <li>• 문화적 승인과 인권보호</li> <li>• 문화적 차별과 연대감</li> </ul>
	□ 다문화적 소통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적 연대</li> <li>• 문화적 활동과 체험</li> <li>• 새로운 문화 창달과 향유</li> </ul>

(4) 통일영역

과목명	단원	내용요소(사례중심)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분단의 과정과 역사</li> <li>• 평화공존과 국가발전</li> <li>• 민족번영과 인류공영</li> </ul>
	□통일정책비교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통합의 의미</li> <li>•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li> <li>• 남한의 통일정책의 변화</li> </ul>
	□통일준비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정권과 대남활동</li> <li>• 남남갈등과 통일의지</li> <li>•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li> <li>• 생활속의 통일과 민족통합</li> </ul>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통치이념과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와 주체사상</li> <li>• 수령 중심주의</li> <li>• 선군사상과 정치</li> </ul>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신분제도</li> <li>• 북한의 법과 처벌</li> <li>•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와 성장</li> <li>• 공연예술과 대중예술</li> </ul>
	□북한주민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가정생활</li> <li>• 북한청소년의 학교생활</li> <li>• 북한의직업과 사회생활</li> </ul>
	□북한의 대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미와 반일의식과 감정</li> <li>• 동맹국과 중국 의존성</li> <li>• 재일 조총련과 대일관계</li> <li>• 북한의 UN활동</li> </ul>
	□국제사회에서의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국가와 인권침해</li> <li>• 경제적빈곤과 군수품 수출</li> <li>•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입</li> </ul>
남북한의 사회문화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신고와 감시</li> <li>• 주민회와 인민재판</li> <li>• 법질서와 자력구제</li> </ul>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와 상징체계</li> <li>• 역사인식과 민족문화</li> <li>• 관혼상제의 실제와 차이</li> </ul>
통일사례 이해	□각국의 통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민족의 국가와 통일</li> <li>• 독일, 동유럽의 통일과 결과</li> <li>• 베트남, 예멘의 통일과 결과</li> </ul>
	□우리에게 주는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적통일과 무력통일</li> <li>• 민족통합으로서의 통일</li> </ul>

(5) 민족통합

과목명	단원	내용요소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	□ 주체성의 의미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자아인식으로서 주체성</li> <li>• 나의 과거와 현재</li> <li>• 자주적 생활능력과 결정능력</li> <li>• 일상생활 속의 자아</li> </ul>
	□ 정체성의 의미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타자의 인식으로서 정체성</li> <li>• 타인의 평판과 요구</li> <li>• 바람직한 인간상과 주체성</li> </ul>
	□ 다중정체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자의 다양성과 자아인식</li> <li>• 다양한집단과 소속감</li> </ul>
민족적 정체성	□ 민족정체성의 의미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민족공동체</li> <li>• 단군 ~ 조선시대의 역사</li> <li>• 남북한현대문화사의쟁점</li> </ul>
	□ 남북한 주민의 다중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인간관계</li> <li>•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집단 소속감</li> <li>•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과 정체성</li> </ul>
	□ 미래사회의 민족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주의의 두얼굴</li> <li>• 문화적 다수집단으로서 한민족</li> <li>• 다민족 사회와 열린 민족정체성</li> </ul>
시민적 정체성	□ 주체성과 시민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속의 정치와 나</li> <li>• 집단소속감과 의사결정능력</li> <li>• 집단구성원의 역할과 의무</li> </ul>
	□ 시민의식과 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인식</li> <li>• 시민의 역할과 의무</li> <li>• 시민적 덕성과 정치</li> </ul>
	□ 정치참여와 시민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와 인민주권</li> <li>• 정당, 선거, 시민사회 활동</li> <li>• 시민연대감과 집회</li> </ul>
정체성 갈등과 해결	□ 내안의 정체성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욕망과 능력</li> <li>• 욕망과 관계적 기대역할</li> <li>• 공동체의식과 자아정체성</li> </ul>
	□ 나-너의 정체성 인식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이념배제의 가치</li> <li>• 갈등사안과 정체성 분리의 자세</li> <li>• 대화를 통한 정체성 갈등의 해결</li> </ul>
	□ 타인의 주체성과 정체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의 자기결정권과 민주주의</li> <li>• 정체성의 강요와 방해 금지원칙</li> <li>• 인간존중의 의미</li> </ul>

# 05

##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이라 정의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②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③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④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1997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주도한 2010년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19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에 접수중임.
-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북도, 성남시, 안양시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 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교육, 공민교육 등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목표나 내용은 대동소이함.
-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 충청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운영중인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자치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교육, 자원봉사 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정영역별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있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목표는 가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마그데부르크선언(Magdeburger)을 참조하여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제로 민주시민을 위한 제도화 추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정립, 민주시민교육의 공정한 추진체계 확립,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함.
- 도민교육프로그램들과 연계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도차원의 기획단 구성,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민교육프로그램개설시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의무편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와 시군차원의 표준교재 제작, 민주시민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청남도에서는 일반도민, 강사,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학생 등 대상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문교양, 민주주의, 평등, 공동체, 지방자치, 다문화, 통일, 사회봉사, 역사, 정치, 환경, 성인지, 인권 등 교육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책제언

- **첫째, 민주시민교육 추진근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계획수립**
  - 충남도와 시군,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육대상 및 주제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기획 및 집행체제 마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차원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해 충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특히 평생교육진

홍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기획단” 을 구성,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을 모색함.

-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특별위원회” 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을 협의함.

● 셋째, 도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한 유능한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있는 강사의 양성이 시급함. 강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중앙기관 및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충청남도에서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의뢰하여 이를 수료한 자중에서 선발하여 활용함.

● 넷째, 교육주제 및 교육대상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주제 및 교육대상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

-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개발함.

- 충남 도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중 주민자치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등에 대한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비함.

- 민주주의, 통일, 정치 및 인권분야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거나, 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 다섯째, 도 및 시군 차원의 다양한 교재 제작 및 활용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와 시군차원의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함.

- 교재는 교육형태와 교육대상에 따라 동영상, 오디오북, 단행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함.

● 여섯째, 도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도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시행방안으로 충남도 차원의 모든 도민교육프로그램에 앞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격을 반드시 사이버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도민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의원 남인순,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2017.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강원택·김종범. 2011.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적 접근과 정치적 교육. 2011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 22.
-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외.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창의지성).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2016.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2016년 교육정책연구보고서.
- 문성근.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 및 전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워크숍  
자료에서 참고.
- 박재창 외 공저. 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도서출판 오름.
- 서울시교육청. 2015.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선거실(법제과). 2011.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1-4호.
- 신형식. 2012.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 심익섭. 2004.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  
육학회보』 제9호. 281-305.
- 유석열. 198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 음선필. 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범웅. 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49  
집. 33-65.
- 정창화. 200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에드.
- 조찬래. 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